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

핵발전 확대와 수출 홍보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표현의 자유와 민중생존권 탄압 중단
모든 핵무기 폐기, 평화체제 실현
핵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로 전환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반핵의 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반핵시민회의,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아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 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미난복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 학생행진,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탈핵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통합진보당,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합천평화의집, 환경운동연합, 녹색당(준), 반전평화연대(준) / 2월 13일 현재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없는 세상’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10가지 진실

1. 핵안보정상회의? ‘죽음의 장사꾼’들이 몰려온다!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2010년 워싱턴 회의에는 세계 47개국 정상들과 3개 국제기구(UN, EU, IAEA)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핵테러’를 국제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로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이 핵물질을 갖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국가가 핵물질·시설의 보호능력을 높이고,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법과 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3/26~27)에서는 ‘핵테러 대처를 위한 협력 강화’라는 기치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핵무기 감축이나, 후쿠시마 사고로 안전 신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핵발전 축소는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2. 핵안보 = 핵 패권 유지! 핵발전 확대!

핵안보란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9·11 테러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커졌고,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개별 국가를 넘어 여러 나라가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이야기 할 때, 전에는 핵군축과 비확산이 주된 의제였습니다. 핵군축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점차 그 수를 줄여 핵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고, 비확산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물품이 퍼지는 것을 국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군축과 비확산의 약속을 전제로 다른 나라들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즉 핵발전을 하는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핵무기나 핵기술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와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핵발전 기술을 전용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위선이며, 핵발전이 핵무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폐기하지 않는 채 핵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탈핵의 흐름을 거슬러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3. 핵테러를 없애려면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없애야 한다!

핵테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안보 정상회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핵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핵으로부터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비확산 정책보다 강력하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입니다. PSI는 해상·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신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항공기를 세워 검색, 나포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입니다. PSI는 의심만으로 배를 세우거나 승선하고 나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력까지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PSI 같은 공격적인 확산방지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너무 많은 핵무기가 있고, 핵발전을 하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보유를 시고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세계 핵무기는 최대 20,500기에 달한다고 추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핵무기에 안보 위협을 받는 나라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애를 씁니다. 핵확산을 막으려면 핵무기 보유

국들이 핵군축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핵무기 공격의 위협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의 위험성이 날날이 밝혀져 세계적으로 탈핵의 흐름이 일고 있는 지금, 핵발전 비중을 점차 줄여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 2011년 세계 핵무기 현황 (출처:미국 과학자 연맹) 】

국가	실전배치 전략핵무기	실전배치 전술핵무기	운반체 분리	비축	전체 재고량
러시아	2,430	?	5,500	8,000	11,000
미국	1,950	200	2,850	5,000	8,500
프랑스	290	불명	?	~300	~300
중국	0	?	~180	240	240
영국	160	불명	65	225	225
이스라엘	0	불명	80	80	80
파키스탄	0	불명	90~110	90~110	90~110
인도	0	불명	80~100	80~100	80~100
북한	0	불명	<10	<10	<10
합계	~4,830	~200	~8,650	~14,000	~20,500

4.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가 국격 향상? 탈핵의 흐름을 거스르는 국제적 망신!

이명박정부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회의를 유치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왔다고 하더니,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해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돌아봅시다. 정상회의 한다고 과도한 경호 조치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노점상 철거와 이주노동자들 단속·추방에, 금융자본을 비판하는 시위마저 탄압하더니 제대로 된 경제위기 해소방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G20은 한국의 국격을 높인 회의가 아니라 경제위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삶의 위기에 몰린 민중들을 탄압하는 회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핵 안전 신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핵발전 폐기, 탈핵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을 하는 한 안전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산업을 부흥시키려 합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게다가 대통령이 나서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 취지였던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훨씬 더 핵이 많은 세상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5.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핵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북한과 이란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PSI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국제법도 무시하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 선박과 항공기를 정선, 나포하는 행위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한반도와 같이 불안정한 정세에서는 자칫 큰 참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 자체에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억지력을 강조하며, 핵발전에 여념이 없는 국가들이 ‘핵안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핵안보 논리는 핵보유 국가들의 핵군축 의무를 부차화시키고, 후쿠시마 사고로 형성된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을 거슬러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군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보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들어 핵발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핵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국 핵무기 감축과 핵발전 폐기가 없는 핵안보는 결코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핵발전 확대와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수만개의 핵무기를 쌓아놓고, 핵억지력을 강조하며, 치명적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려는 국가들이 ‘핵안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안보가 아니라 모든 핵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폐기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핵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또 늘리려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항의하고 행동합시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행동 | www.no-nss.org

6. 핵발전소 안전을 지키는 건 필요한 일 아닌가요?

지난해 3월 대규모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보여 준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언제든 핵발전소의 냉각 장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고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수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폭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돈을 들이붓는 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아니더라도 드리마일과 체르노빌 핵사고, 한국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아니라 핵발전소 그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핵산업계회의(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를 열어 핵발전소 수출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토록 위험한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핵단지까지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시도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해 3월에 사고가 난 뒤 공기와 물을 통해 흘러나간 방사성 물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알려진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발전소에서는 핵연료가 녹아내렸고 지금도 그 내부가 어

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일본 정부조차 이 사고를 처리하는 데에 4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수십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환경도 방사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이 끔찍한 사고의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 때문에 백혈병이나 갑상선 암, 유방암 같은 악성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한 세대로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다고 하는데 위험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정한 기준치는 의학적 ‘안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준치는 의료 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등 대규모 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해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한 그 기준은 넘지 말라고 정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고 나라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을 적용하면 후쿠시마 사고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내린 비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사고 뒤 아예 기준치를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원래 기준치대로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시켜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극소량의 방사선으로도 암발생률 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탈핵교수모임이나 반핵의사회 등이 결성돼 핵없는 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9. 핵발전소는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아닌가요?

값싼 전기를 만들려면 핵발전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핵발전소가 처음 만들어지던 1950년대에 핵발전소는 가장 비싼 발전소였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지만 지금도 핵발전소는 가장 비싼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에만 2~3조 원이 필요하고, 30~40년 수명의 핵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사고와 고장도 많이 납니다. 한국에서 지난 1978년 이후 일어난 사고와 고장이 모두 6백 50 건이 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 준 것처럼 대형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 복구비용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도 없어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돈이면 안전하고 깨끗한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은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시설은 핵발전소보다도 온실가스를 훨씬 덜 배출합니다.

더욱이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핵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세계에는 핵무기 12만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2000톤 이상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만년 동안 매립되어야 할 핵폐기물을 남기고, 언제든지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10. 핵발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는 ‘전력대란’ 운운하며 핵발전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로 공장들이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훨씬 싸고 기술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조업 부문의 전력 효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높여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전체 전력 생산량에 맞먹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국내 연구자들은 빠르게는 2030년, 길게는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없앨 수 있는 ‘탈핵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탈핵’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 덕분에 재생에너지 비용은 핵발전은 물론이고 화력발전보다도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류와 생태계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적은 양이라도 건강에 해롭고 암을 일으킵니다

방사능 피해의 종류

핵발전 사고는 주로 방사능피해입니다. 핵폭탄도 폭발에 의한 피해만큼이나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큼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급성 방사능 피해와 오랜 시간에 걸친 만성 방사능 피해로 나뉩니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은 백혈병, 암, 백내장,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낮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어도 방사능에 비례하여 평생 동안 암과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합니다.

방사능은 어느 정도면 안전한가

방사능(선)은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민감도가 높아 더 위험합니다. 미국 국립학술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기초로 2006년 <저수준 전리방사능의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펴내 “방사능은 안전 기준이 없으며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에 비례하여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밀리시버트라는 기준도 안전성의 절대기준이 아닙니다. 방사선은 가능한한 피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벨로루시에서는 UN에 의해 확인된 어린이 갑상선암 환자만 6,8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린피스도 이 사고로 27만명이 암에 걸렸고 앞으로 9만 3천여명이 더 암에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수많은 피해를 낳을 것입니다.

일본의 피해와 일본정부의 무책임

후쿠시마 핵발전소 남북으로 200~250km 지역까지 방사능 낙진이 퍼졌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가 연간 피폭한계치라고 말하는 1밀리시버트(mSv)(시간당 0.114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보아도 도쿄 일부까지 연간 피폭허용량을 초과합니다. 이 방사능 피해는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세습 137은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는 장기적 거주 기준을 연간 1밀리시버트로 정했지만 일본정부는 연간 20밀리시버트를 어린이들 등기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지금도 방사능 피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유럽전체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아직도 영국 일부에서는 양을 방목하지 못합니다. 작년 4월 우리나라에 내린 비에는 미국 식수기준으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 방사능오염 식품수입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방사능이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면 일본식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부피폭보다 내부피폭이 훨씬 심각한 건강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거나, 핵발전 자체를 줄이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감축이나, 핵발전 축소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 한 핵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으며, 핵무기 공격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오는 2~3월에는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등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히려 핵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고서 핵무기·핵물질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독점을 유지시켜 줄 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탈핵의 흐름이 대세가 되고 있는 지금,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핵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행동



함께 해요!

3. 19 ~ 27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 집중행동

- 2. 13~3. 12 평화박물관, 탈핵교수모임과 함께하는 반핵강좌
- 3. 7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행동 주최 강연회 (장소 미정, 오후 7시 30분)
- 3. 10 후쿠시마 대재앙 1주기 행사 (서울 시청광장, 오후 1시~6시,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3. 19 핵없는 아시아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3. 22 국제포럼/반핵아시아포럼(NNAF)
- 3. 23 핵산업계회의 항의집회
- 3. 23~24 합천비핵평화대회 (주최 : 합천평화의 집)
- 3. 25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 집중집회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을!>**
- 3. 26~27 핵안보정상회의의 항의행동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 집중집회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을

일시 _ 3월 25일 오후 2시

장소 _ 서울 도심

주최 _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행동

